

## 민주연구원 '과도한 민원으로 위축된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 방안'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과도한 민원으로 위축된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 방안 -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이번 브리핑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축구 제한, 운동회 위축,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축소 등 교육활동 전반의 위축이 나타나는 현실을 진단하고, 학생의 교육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브리핑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위축이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소음·형평성 관련 민원과 법적 분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과 소송 부담을 교사 개인이 사실상 직접 감당하는 구조로 인해, 학교가 교육활동 보장보다 민원 회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학생의 놀이권·체험권·신체활동권이 제약되고, 학교 교육활동의 공공성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브리핑은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 첫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점심시간·방과후 놀이와 체육활동, 운동회, 현장 체험학습 등이 학교 교육과정상 정당한 활동임을 분명히 하는 학교 교육활동 기본보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둘째, 반복적·위협적·보복성 민원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교육청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도록 하는 민원 대응의 기관 책임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셋째,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또는 교육청 전담대리제를 검토하고, 현장체험학습 면책 제도의 실효성 보강, 학교행사 소음 민원 처리기준 정비, 학부모·지역사회와의 사회적 합의 형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은 “학교는 민원을 피하기 위해 교육활동을 줄이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이 배우고 뛰고 성장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이번 브리핑은 학생의 교육 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과 분쟁의 부담을 교사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끝/